

전남도, 폭염 피해 예방 총력

전남도가 폭염 피해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전남도는 2일 “제5호 태풍 ‘송다’, 제6호 태풍 ‘트라세’가 소멸하고 고온다습한 공기가 유입되면서 폭염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 만큼 폭염 피해 예방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남지역은 지난 6월 19일 첫 폭염특보가 발표된 이후 지난 2일까지 누적 폭염일수 33일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폭염일수 26일보다 7일 늘어난 수치다. 이 기간 온열질환자 74명, 151개

축산농가(돼지·닭·오리) 총 2만4천684마리 폐사, 농작물 시들음 고사 471ha 등의 피해가 발생했다.

전남도는 지난 5월 20일부터 9월 30일까지를 폭염 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22개 시·군과 함께 각종 폭염 대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폭염으로 인한 도민의 생명·재산 피해를 막기 위해 홍보와 예방·예방 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 기존 폭염 대책 중 어려운 계층 안부 전화와 문자 발송, 마을·가두방송 횡수 및 빈도를 늘리기로 했다. 시·군 도

로 살수차 운영도 활동 반경을 넓히고 유동인구 밀집지역과 횡단보도 인근 그늘막 등 피해 예방에 중요한 폭염 저감시설을 지속 확충한다. 특히 폭염 대책 개선을 위해 도민·공무원(520여명) 대상 설문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무더위쉼터 활성화, 야간·주말 연장 운영하는 쉼터 냉방비 추가 지원, 어르신 대상 선크림 보급 등 보완 사항을 즉시 조치하기로 했다.

또한 올해 폭염 대책에 반영된 기존 ‘폭염대비 양산대여소’ 서비스를 운수업체와 협업해 ‘이동하는 양산대여 버스’

취약층 홍보·예방 활동 강화...살수차·그늘막 확대 농·축산물 대책 상황실 운영 고수온 대응도 만전

로 발전시키고, 2개 시·군에서 시행 중인 ‘드론활용 광범위 예방활동’이 타 시·군에 확산하도록 인력·예산 등을 확대할 방침이다.

도민의 소중한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분야별 피해 대응 활동에도 힘쓰고 있다.

농·축산 분야에선 농·축산물 폭염 대책 상황실을 지속 운영하는 한편, 자연 재해에 대비한 농작물과 가축 재해보험 가입을 독려하고 있다. 폭염 피해 예방 사업으로 과수·시설작물의 경우 과수 생산시설 현대화 사업, 시설원예 생산비 절감 사업 등 3개 사

업에 69억원을, 가축의 경우 고온스트레스 완화제 지원, 축사 지붕 열차단재 도포 등 4개 사업에 40억원을 지원한다.

전남도는 2018년 김영록 지사의 특별지시 이후 5년 간 긴급예비비와 본예산으로 616억원을 투입해 축산 분야 폭염 피해 방지 시설과 고온스트레스 완화제 등을 지원했다. 그 결과 도내 폐사한 가축이 특별지시 전인 2018년 7월 말 55만7천마리였던 것이 올해 같은 기간 2만3천625마리(4%)로 현저히 줄었다.

수산 분야에선 고수온 현장대응반을 운

영해 우심해역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역화산소공급기, 자광막 등 고수온 대응 장비 1만938대를 사전 구축해 고수온 발생 시 신속 대처하도록 했다.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가입률을 높이기 위해선 기존 20%였던 어업인 자부담율을 올해부터 10%로 낮췄으며, 보험료 지원 한도액을 50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상향 지원할 예정이다.

김신남 도민안전실장은 “입추가 다가오지만 아직 안심할 단계는 아니어서 보건복지, 농축산식품, 수산 등 관련 실·국과 폭염이 끝날 때까지 총력을 다해 예방과 피해 복구에 힘쓰겠다”며 “도민들도 온열질환에 따른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폭염에 대한 경각심을 놓지 말고 특보가 발표된 날 야외에서 무리한 활동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다. /김재정기자

행안부 경찰국 공식 출범

행정안전부 안에 ‘경찰국’이라는 이름의 경찰업무조직이 2일 출범했다.

경찰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전문가 자문위원회를 구성한 지 석 달여 만이다. 이에 따라 내무부(행안부의 전신) 치안본부가 1991년 내무부 외청인 경찰청으로 독립한 지 31년 만에 행안부 내 경찰 업무 조직이 생기게 됐다.

경찰국은 ▲경찰 관련 중요정책과 법령의 국무회의 상정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에 대한 임용 제정 ▲국가경찰위원회 안건 부의 ▲자치경찰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법률로 규정된 행안부 장관의 권한 행사를 보충한다.

경찰국은 총괄지원과, 인사지원과, 자치경찰지원과 등 3과 16명으로 구성된다. 형식적으로는 차관 아래 설치됐지만 사실상 이상민 장관 직속으로 운영된다. /연합뉴스



경찰위 “경찰국 강행 유감” 김호철 국가경찰위원회 위원장 등 위원들이 2일 서울 서대문구 미군동 경찰청에서 경찰국 강행 유감 표명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경찰위 위원들은 이날 회견에서 경찰국 출범과 관련해 “법령·입법 체계상 문제점을 지속 해서 제기해왔는데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고 시행되는 것에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농기계 면세유 상승분 10월까지 추가 지원

도, 지원단가 1ℓ 당 183원→269원 상향...농가 부담 경감

전남도가 면세유 가격 급등으로 어려운 농업인을 위해 농업기계 면세유 구입비 지원 단가를 늘려 오는 10월까지 추가 지원한다.

2일 전남도에 따르면 면세유 구입비 지원 사업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면세유 가격이 60% 이상 급등한 데 따른 것이다.

면세유는 정부의 유류세 인하와는 상관없이 사용량이 많은 농업용 경우 가격은 올해 1월 1ℓ 당 가격이 961원이었으나 최근 1천500원대를 넘어섰다.

전남도는 올해 3월부터 6월까지 사용한 농업용 면세유에 대해 1월부터 3월까지 유가 상승분의 50%인 1ℓ 당 183원씩

을 정액 지원, 농업인의 경영비 부담 경감에 도움을 줬다.

이번 추가 지원 계획에 따라 7월부터 10월까지 4개월 간 사용한 농업용 면세유에 대해선 1ℓ 당 269원을 보조한다. 지원 단가를 1ℓ 당 183원에서 상향한 이유는 당초 면세유 구입비를 지원한 이후에도 면세유 가격이 지속 상승했기 때문이다.

사업 대상은 기존과 같이 전남에 거주하면서 면세유류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는 농업인·법인 중 사업신청서를 제출한 자다. 전남도는 7월부터 10월까지 사용한 면세유(휘발유·경유) 6천400만 ℓ에 한정해 172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김재정기자

“지역신문발전기금 구독료 예산 복원하라”

지방신문협회·한국지방신문협회 공동성명 기재부·문체부에 예산 복원·기금 확충 촉구

대한민국지방신문협회(대신협)와 한국지방신문협회(한신협)는 2일 “기획재정부의 지역신문발전기금 구독료 지원예산 대폭 삭감이 지역신문 지원제도를 위기로 몰고 있다”며 “구독료 예산을 복원하고 지역신문 지원을 정상화하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대신협 소속 29개 신문사와 한신협 소속 9개 신문사는 이날 공동성명을 내고 “지난해 12월 이뤄진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의 상시법 전환을 계기로 지원 예산이 증액돼야 함에도 기획재정부의 2023년 지역신문발전기금 예산 1차 심의 결과, 기금 사업 중 규모가 가장 큰

구독료지원사업(소외계층 및 NIE) 예산이 2022년 대비 10억5천만원이 삭감됐다”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는 “지난해 12월 이뤄진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의 상시법 전환에 따라 지역신문발전기금 재원이 안정될 수 있는 획기적 계기가 될 것이라 믿고 크게 환영했다”며 “그러나 기획재정부의 2023년 지역신문발전기금 예산 1차 심의 결과를 보고 이러한 기대가 무너졌다”고 밝혔다.

이어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의 상시법 전환을 계기로 지원 예산이 증액돼야 함에도 오히려 대폭 삭감되는 상황이

반복되는데 대한 지역신문들의 우려는 그 어느 때보다 크다”고 덧붙였다.

특히 “지역신문은 풀뿌리 민주주의와 지방자치의 핵심 기관으로서 제 역할을 다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며 “지역소멸 위기와 코로나19라는 복합적 위기 아래 경영여건이 더욱 악화되는 상황에서 지역신문발전기금 지원 제도는 믿음직한 역할을 해왔다”고 정서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구독료 지원사업은 지역사회의 취약계층의 정보격차를 해소하고 지역 미래 독자의 읽기 문화 확산에 기여하기 위한 공익 사업이다.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에 따라 지역신문 경영 여건 개선을 위해 진행되는 핵심 사업이기도 하다.

앞서 지난 7월 지역신문발전위원회도 기획재정부의 구독료 예산 삭감에 대해

예산 복원을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했으며, 국회에서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승수 국회의원이 해당 예산 복원을 촉구하기도 했다.

이날 성명은 29개 언론사가 소속된 대한민국의 지방신문협회(강원도민일보, 경기일보, 경남도민일보, 경남일보, 경북매일신문, 경북일보, 경상일보, 광남일보, 광주매일신문, 국제신문, 기호일보, 남도일보, 대구일보, 동양일보, 무등일보, 영남일보, 울산매일신문, 인천일보, 전남매일, 전남일보, 전북도민일보, 제민일보, 중도일보, 중부매일신문, 중부일보, 충북일보, 충청매일, 충청투데이, 한라일보)와 9개 언론사로 구성된 한국지방신문협회(강원일보, 경남신문, 경인일보, 광주일보, 대전일보, 매일신문, 부산일보, 전북일보, 제주일보)가 함께 발표했다. /김진수기자

▶1면 ‘소비자물가’서 계속

이 중 도시가스(18.1%), 전기료(18.2%), 지역난방비(13.0%)를 포함하는 전기·가스·수도는 통계 작성 이래로 최대 상승률을 기록했다.

공공서비스에서는 국제항공료가 전년 동월 대비 23.0%, 개인서비스에서는 전월 대비 국내단체여행비 10.3%, 호텔 숙박료 16.4% 등이 크게 올랐으며 생산비는 전년 동월 대비 15.8% 오르는 등 외식비 또한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전남도 농축수산물(6.3%), 공업제품(10.7%), 전기·가스·수도(15.6%) 등 상품이 9.9%, 집세(1.2%), 공공서비스(1.0%), 개인서비스(6.1%) 등 서비스 4.2% 각각 늘었다.

호남지방통계청 관계자는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은 농축수산물과 서비스, 공공요금 등이 견인했다”며 “경기 둔화 우려에 국제유가와 국제 곡물가격 등 대외적 요인이 비교적 완화된 데 따라 이후 상승폭이 둔화될 가능성도 엿보인다”고 밝혔다.

▶1면 ‘전남 의대 설치’서 계속

소병철 의원은 “특별법 발의가 의대 유지를 위한 경쟁이 아닌, 전남의 상생과 협력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2000년 의약분업 뒤 배출되지 못한 의사 수만 3천225명으로 전남도의 대대 설립과 공공의료 과중 현실은 의사 증원을 반대하는 의사협회의 입장을 고려해 그동안 배출되지 못한 의사

정원을 일부만 복원하면서도 지역 필요의료 공백을 메우겠다는 취지가 담겨 있다”고 밝혔다.

이어 소 의원은 “전남의 30년 꿈인 의과대학 유치가 실현된다면 동부과 서부, 여당과 야당이 아닌 하나의 전남도가 돼 힘을 합쳐야 한다”며 “모든 역량을 동원해 윤석열 정부와 의사협회를 단계적으로 설득, 2~3년 내에 전남도 의과대학 유지를 반드시 성공시키겠다”고 강조했다.

◀ 광주매일신문

▶ 광고국/☎ 650-2099
650-2071-2
F. 650-2016

▶ 시내지국 및 각 지방지사

**광주지방법원
판결공시**

제1심 사건번호 광주지방법원 2020고정364
근로기준법위반

피 고 인 안중구

위 피고인은 근로기준법위반죄로 기소되었으나 공소사실 중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은 범죄의 증명에 필요한 증거가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의 판결이 선고, 확정되었음을 공시함.

2022. 7. 28.
판사 성재민

**광주지방법원
판결공시**

제1심 사건번호 광주지방법원 2020고단4145
사기

피 고 인 천정준

위 피고인은 사기죄로 기소되었으나 범죄사실의 증명에 필요한 증거가 없으므로 무죄의 판결이 선고, 확정되었음을 공시함.

2022. 7. 29.
판사 박상수

**구독신청
배달사고**

문의
650-2022

대명OA

취/급/품/목

- 복사기
- 컴퓨터
- FAX
- 레이저 및 잉크젯 프린터
- 전산소모품
- 레이저(토너/드럼)
- 카드리지
- 각종 잉크류
- 복사용지
- 팩스용지
- 판매
- 임대
- A/S

T.375-5880

광주 아시아문화전당 메인상권 빌딩급매

- 중심상업지역 역세권 코너 유동인구 엄청
- 대지 810㎡ 9층건물
- 급매68억(보3억1,000월3,600)부가세별도

*** 주차뺑뺑, 월세뺑뺑, 월세는 지정일자에 통장바로 입금됩니다
돈 벌어주는 귀한 빌딩입니다.

급히구합니다 = 조건맞으면 바로 계약합니다

상가빌딩, 상가주택, 모텔, 가든, 나대지
야생장, 창고부지, 물류센터부지 등등 찾고있습니다.

[급매전문] 즐거운공인중개사무소
대표공인중개사대표 유재관 010-6495-3787
광주 북구 임동480 LH주공아파트 옆 동운고가입구
등록번호 북구29170-2019-00097

부실 채권 못 받은 돈 회수 전문

**판결문, 공증, 공사대금, 각서
계약서, 임금내역, 각종 채권상당**

선수금 출장비용 없음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할 수 있음

**채무자 재산, 신용, 주거래은행, 차량 등 파악
실거주지 파악, 법인회사 부도시 회수 가능**

연락두절 채무자 파악
개인 법인 신용조사 재산조사만 별도가능
선수금만 주고 돈도 못 받고 계산분들이 많으나 당사는 여러분의 재산을 회수한 후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사원모집 신입·경력사원
영업팀 / 채권추심팀
▶지사오피 상담◀

찾아볼 편의 법철자 준수 시간적 효율

호남지사 062-417-4731
(주)제이엠신용정보
채권추심 전문법인